

지역연구 대상으로서 환동해 지역의 설정*

권 세 은

경희대학교 러시아어학과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해륙학으로서 환동해학 모색 |
| II. 왜 환동해 지역인가? | V. 결론 |
| III. 복잡적응시스템으로서 환동해 지역의 인식 | Abstract |

Key words(중심용어): 동해(East Sea), 환동해지역(East-Sea Rim Region), 환동해연구(East-Sea Rim Studies), 환일본해 연구(Japan-Sea Rim Studies), 해륙학(Land-Sea Interaction Studies)

국 문 요 약

이 논문의 목적은 환동해 지역연구의 기초적 단계로서 환동해 지역을 규범적 차원과 인식론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지역연구는 특정 지역을 왜 연구하는가라는 규범적 차원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사회적 실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인 인식론적 차원의 논의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환동해권에 대한 관심은 아직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환동해 용어가 추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환동해 지역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점차 통념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환동해라는 개념은 그 현실성을 부여받음으로써 환동해라는 지역단위는 연구의 실천적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환동해라는 지역은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구성되는 세계이다. 이 지역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능동적인 주체가 환경과 상호 교류하며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자기조직화되는 장(場)이다. 이러한 지역은 특정 요소로 환원하는 방법을 통해 특정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복잡적응체계로서 환동해 지역은 존재론적으로 창발되기 때문에 그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중층구조를 가정하고, 근본적으로 세계는 총화되어 있다는 인식을 전제해야 한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9-362-A00011). 이 논문은 '2010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국내학술대회(2010.6.18)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환동해 지역은 정체성 및 그 유지양식, 메커니즘에 따라 타 체계와 구분되는 체계로 볼 수 있다. 이런 공간은 ‘개념’,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결국 복잡한 현상을 궁극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는 환원주의를 벗어나 현상을 존재론적 층위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층위를 고유한 분석수준으로 삼아 고유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I. 서론

환동해권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측면, 특히 지방 수준의 정책적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동해권 경제 및 교류협력에 관한 논의는 1990년 길림성 장관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중국 측이 두만강 하구지대를 중국, 북한, 러시아 당국과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한 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최승업 2002, 3). 이어 1991년 ‘두만강개발협정’의 체결,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의 자유무역경제지구’의 선포, 1992년 러시아의 ‘대블라디바스톡계획’의 발표 등으로 환동해권 역내 국가들의 지방개발 정책이 구체화되어 갔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실시,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남북경제협력 추진 등 탈냉전, 세방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동해’라는 공간은 점차 긴장과 대립의 장에서 협력으로 장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각 지방, 환동해권 연안의 지방들이 1993년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1994년 ‘환동해 거점도시회의’ 등과 같은 조직을 통해 상호 협력을 도모해 오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는 1994년 ‘환동해권 카르텔’ 구상 발표, ‘환동해권 4개국 지사·성장회의’를 개최하면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문적 차원에서 이미 일본은 오래 전부터 환동해 공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 환동해에 대한 연구는 지방수준에서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 시작되면서 사회적 및 시대적 관심도에 종속되는 경향이 강하다.

러시아는 2003년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20’, ‘러시아 교통전략 2020’, 2007년 ‘2013년 극동·자바이칼 경제사회 개발 연방특별 프로그램’ 등을 발표하면서 극동지역 개발과 환동해 지역을 연계하고 나아가 환동해 지역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이해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 진흥 추진 종합계획’, ‘장지투(장춘-지린-투먼) 개발사업’ 등으로 동해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나진항 사용권 획득을 통한 동해로의 진출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관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제 동해는 새로운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의 관심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은 아직 미미하다. 10여 년 동안 다양한 회의에서 교류 확대 필요성 및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환동해권 역내 협력은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 및 개발정책, 에너지/환경/물류/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높은 교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산업기반 과 교통접근성, 작은 시장규모, 열악한 제도적 환경 등과 같은 경제적 제약 요인, 뿐만 아니라 세계적·동북아·한반도 수준의 정치·안보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실질

적인 수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한반도 남북문제,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또다시 국가적 차원의 지정학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역내 국가간 관계의 수준이 정체되어 있다.

한국에서 환동해 지역의 교류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동해 연안은 여전히 변방지역으로 인식되고 지방개발 차원에서 주로 논의 되면서 동해 연구는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협력이 존재하든 하지 않든, 경제적 차원·정책적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던지 간에 동해라는 공간은 실재적인 장으로서 학문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대상이다. 환동해 연구가 이제 학문적 차원으로 전환될 시점에 이르렀다. 환동해에 대한 학문적 수준의 연구, 나아가 종합적인 지역연구로서 환동해학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연구는 ‘어떤 지역을 왜 연구하는가?’라는 규범적 차원(Normative level)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왜 연구의 대상으로 등장했는가? 존재하는 실재(reality)를 인식하고, 그 실재의 질서 혹은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것이 학문의 주요과제이다. 그리고 사회적 실재를 어떻게 접근(설명,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인 인식론적 차원(Epistemological level)에서 다양한 입장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 지역연구의 기초적 단계로서 연구의 규범적 차원, 인식론적 차원에서 환동해 지역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왜 환동해 지역인가?

1990년대 전후 사회주의권의 붕괴, 냉전의 종식, 아시아권의 경제발전 등과 같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아시아는 탈근대 담론과 연계되면서 실재를 넘는 담론(discourse)으로 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 주요경향은 대안문명론, 정체성론, 공동체론과 같은 지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안문명론이나 정체성론은 문명론적, 문화주의적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공동체론은 정책적이고 기획적 성격을 띠고 있다.¹⁾ 때문에 담론 논리에 따라 지역의 범위는 다르게 규정된다.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담론은 서구식 오리엔탈리즘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분법적 구도에서 서구 문명에 대한 극복이나 제3의 문명의 창조 및 근대 극복 방안으로서 동아시아를 가정한다. 즉

1) 문명론 시각에서 동아시아 문명은 서양문명의 대안, 자본주의 문명의 대안, 사회주의 문명의 대안으로서 등장한다. 동아시아 정체성 담론은 문명론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서구의 대안과 같은 거대담론(문명론적 시각)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동아시아 가치, 특성과 같은 ‘동아시아성’이 존재한다고 믿고 이를 찾아내려 하고 있다. 정체성 담론의 문화주의적 사고는 동아시아 문화의 동질성, 일체성, 단일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역사과정에서 형성된 차이, 변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동아시아의 통합 구상과 같은 기획의 속성이 강하다. 경제협력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경제공동체’ 논의, 특정국가의 패권을 견제하고 역내 영토분쟁, 해양분쟁, 자원경쟁, 국제테러, 군비경쟁 등과 같은 제반 안보에 대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정치-안보 차원의 ‘안보공동체’ 논의, 사회-문화차원의 상호이해 증진 및 협력을 추구하는 ‘사회-문화 공동체’ 논의 등은 세계화차원의 지역주의 대두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이해를 내세우고 있다. 동아시아 담론의 출현과 인식론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글 참조(박상수 2010, 73-100).

‘동양’과 ‘서양’의 대립구도에서 동아시아가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동아시아가 ‘하나’이고 동아시아의 정체성이 주어졌으며, 서구의 근대성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서양이 내재화되고, 대립과 경쟁, 지배와 피지배로 점철된 동아시아에서 경화되고 선언적인 이런 논의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정 공간의 다양한 상호관계성의 범주화는 다수의 동아시아를 가정할 수 있다. 지역-국가-지방 차원에서 형성되는 중층적인 상호관계성으로의 범주화는 환황해권, 환동해권, 대륙권, 해양권 등 다양한 아시아를 형성하게 된다. 이 범주는 가변적이며 유동적인 공간이다. 지리적으로 동아시아라는 공간은 문명, 인종, 종교, 문화, 물류, 인구이동 등 각 수준별로 형성되는 중층적 유동공간으로 다양한 구획이 가능하다(박상수 2010, 97). 기존의 동아시아 관련 연구는 어떤 공통의 성격 또는 유사한 성격을 찾거나 고유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등 등질지역을 찾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지역연구란 어떤 중심지의 기능이 미치는 범위인 기능지역이나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관계성이 형성되는 지역을 이해하는 작업이다. 여기서 하나의 동아시아라는 동아시아 담론을 넘어 동아시아 내에 형성되어 온 복합적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동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환동해권의 상호관계성은 20세기 후반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주제이다.

한국에서 환동해 관련 지역연구²⁾는 주로 지방(강원도, 경상북도)에서 진행되면서, 논의는 정책적 차원의 독도문제 또는 동해표기 관련 연구이거나, 지방적 수준의 환동해권 경제 및 교류협력, 환동해경제권 구상³⁾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구에서 환동해 경제권이라는 개념조차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동해를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반도 동해안, 일본의 서해안,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범위로 정하고 있다. 광의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환동해 경제권의 해석에서 행위자는 국가간 지역경제일 수도 있고 지방간 경제권일 수도 있다. 행위자의 주요 관심사는 교역확대, 관광객 유치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한국 동해안 지역, 일본 서해안 지역), 외자유치, 교역확대, 물류루트 확보와 같은 산업구조 고도화(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김원배 2006).

우리가 인식하던 하지 않던 이 지역은 근대와 탈근대, 냉전과 탈냉전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역내 국가들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정책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실체로서 장(場)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한 행위자가 소통하는 장이다. 지리적으로 환동해 지역은 탈냉전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 러시아의 자본주의화 등의 역동적인 지역 질서의 변화가 가시화되는 공간이다. 그리고 환동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 관계가 활발하게 변모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국가적 시각은 물론 초국가적 시각과 지방적 시각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2) 동해 명칭관련 연구(김신(2005)), 지방의 협력네트워크 관련 연구(이정남(2006)), 경제협력관련 연구(구자문(2008), 구형권(1997), 김원배(2005, 2006), 서찬수(2005), 심의섭(2009), 안병민(2008), 원동욱(2007), 정여천편(2008), 최승업(1998, 2002)) 참조.

3) 동해를 끼고 있는 한반도와, 일본, 중국 동북부, 극동 러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과 자본, 극동러시아의 풍부한 지하자원, 중국 북 동부와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할 경우 EU나 NAFTA에 필적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블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구상한다.

이 지역에서 기존의 전통적 안보개념을 확대시켜 인간 삶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인간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남북문제, 북핵 위협, 국가 간 영토 분쟁 및 해양영유권 문제 등 기존의 정치적 안보개념을 포함하여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아우르는 환동해 지역의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들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적 차원에서 환동해 지역은 성장잠재력에 비해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소외지역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이는 중심과 주변(변방)의 원활한 순환을 방해하고 불균등한 발전과 정책적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적 구도를 ‘중심과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새로운 구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환동해 지역을 동북아의 주변지역으로 인식하기 이전에 주변부와 중심부가 공유하는 ‘공통 공간’, 공존공간으로 재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경학적으로 환동해는 에너지개발 및 물류운송의 차원에서 교통의 요지이자 결절지역이다. 또한 오랜 저개발 상태로 청정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공간이다. 이는 이 지역에서의 저탄소 녹색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이다. 이에 환동해 지역의 국가 간, 도시 간 경제협력 및 정책개발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역내 주민들의 공동관심사 증대(인권, 환경오염, 빈부격차, 지역개발, 개발공동체 등)로 초국가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로 국가 간 문화 교차현상도 심화되는 추세이며 국가-지방-지역 등 행위주체의 다원화 현상, 정부-시장-시민 사회 등 영역의 다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환동해 지역의 새로운 소통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환동해 생태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환동해 지역은 경제중심의 획일적 근대 개발주의로부터 벗어나 동해의 생태적 환경과 인간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후기 근대적 생태인식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과정에 놓여 있다. 환동해 지역의 자연·인문환경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한국의 환동해지역 연구는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이 개방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한국의 환동해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지방적 차원 특히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교류수준의 상대적 약화, 지방차원 연구의 한계로 인해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일본중심의 ‘일본해학’, 환일본해 담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중국의 동해로의 진출 및 러시아의 극동지역 진출 등과 같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으로서 종합적인 환동해 지역연구는 필요한 시점이다.

III. 복잡적응시스템⁴⁾으로서 환동해 지역의 인식

지역연구에서 ‘지역의 실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인식론적 차원(Epistemological level)의 논의는 필수적이다.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 연구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부각된 연구 주제들이 폭넓게 공유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현상을 개념화, 일반화해 보려는 이론적 시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주로 문명론적 시각에서의 대안문명 연구, 유교자본주의 연구,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델 연구 등과 함께 세계화 추세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 문화공동체, 개발공동체 등과 같은 기획성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에서 현상을 부분으로 분해해서 이해하려는 환원적이고 기계론적 접근방법이 지배적이다.

특정 지역의 성격은 주체와 타자를 이분화하고, 의식과 대상을 분리하는 서구적 개념의 개체론적·기계론적 사고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주체와 타자, 의식과 대상 사이의 관계론적이고 맥락적인 사고와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을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지역성으로 파악하고, 해양과 대륙 어느 한쪽으로 환원하는 실체적 개념이 아닌 움직이는 ‘과정’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민족 또는 국가 중심의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는 인식적 바탕이 될 것이다.

규범적인 차원이나 인식론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기존의 환동해 연구의 한계점은 지역연구라는 학문의 정체성과 관련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규범적 수준에서 환동해 연구가 정책적 관심⁵⁾에 따라 시작되고 인식론적 수준에서는 실증주의적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연구는 자연현상에 대한 가치중립적 연구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경제적이고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선별된 주제에 제한된 연구는 종합적인 연구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지역연구의 논의에서 연구대상의 전체성 및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전체적 맥락 속에서 각 변수들의 복잡한 인과관계, 메커니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이런 논의의 출발점이 ‘지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이다.

지역학, 지역연구를 ‘분류된 지역의 총체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정의한다면 그 연구대상이 ‘지역의 총체성’이라는 점, 연구방법은 종합적, 학제적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

4) 복잡계란 복잡성을 띠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여기서 단순하다는 것은 구성요소간의 상호관계가 없음을 의미하고 복잡하다는 것은 상호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분류는 가정적일 뿐이다. 모든 체계는 근본적으로 복잡계인데 단지 상대적으로 복잡성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복잡적응시스템에서 각 부분들은 부단한 상호작용 과정 및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구조와 기능으로 진화할 수 있다. 그 존재 조건으로는 다수 행위자의 상호작용, 환경과 에너지 또는 질량을 부단히 교환하는 소산구조(dissipative structure), 외부환경에 독립적으로 적응하는 자율성 등이 있다. 그 특성을 자생적 질서를 만드는 창발성(emergence), 부분과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전체성(wholeness), 계층화된 자율성(stratified autonomy), 유사한 특징이 발생하는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 초기조건에 미세한 차이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비선형성(non-linearity), 비선형적인 피드백 순환고리(feedback loops)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권세은 2004, 134).

5) 정책적 또는 학문적 목적은 배타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지역연구가 정책적 목적을 배제할 경우 그 존재의 이유가 약화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타자에 대한 연구는 특정 지역에 대한 관심과 상호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연구의 학문적 목적과 정책적 목적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지역연구의 성과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권세은 2004, 132-133).

역연구는 모든 분과학문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고, 모든 연구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학문의 영역과 방법을 결합시키는 학제적 연구가 지역연구의 주요 방법으로 제시된다.⁶⁾

따라서 중요한 것은 환동해 지역을 규정하는 논리, 지역을 인식하는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환동해라는 지역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능동적인 주체가 환경과 상호 교류하며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자기조직화되고 창발되는 장이요 하나의 세계인 것이다. 이 지역은 구성요소들의 활동 조건일 뿐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로 항상 새롭게 형성되는 장이다. 따라서 환동해 지역은 결속도, 동질성, 경계성으로 표현되는 정체성 및 그 유지양식, 메커니즘에 따라 타 체계와 구분되는 체계이다. 마치 찬합형태⁷⁾로 위계성 및 개방성을 띠는 복잡적응시스템으로 간주할 수 있다⁸⁾.

복잡적응시스템은 기존구조의 균형과괴로 인해 안정성의 경계를 넘어서서 비평형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 과정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역동적 과정으로 전환된다. 이 구조에서 단순한 것은 상호 작용하여 좀 더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처럼 단순한 것들이 에너지를 이용해 결합하면서 복잡한 것으로 변화하는 방식을 자기조직화라고 부른다. 단순계가 상호작용하면서 복잡계로 전환될 때 새로운 특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위수준(구성요소)에는 없는 특성들이 상위수준(전체구조)에서 자발적으로 돌연히 출현하는 현상을 ‘창발’⁹⁾이라 한

- 6) 학제성에 근거하는 지역연구는 그 대상이 ‘제’이고 그 연구방법이 ‘제’이기 때문에 근대적 인식의 틀에 근거하여서는 독자적인 학문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 결국 ‘제’의 영역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의 틀이 필요하다. 이 패러다임에서는 초점이 고정된 개체의 본질(있음의 과학)에서 상호작용(됨의 과학)으로 이동함으로써 선형평형보다는 비평형, 존재(being)보다는 과정(becoming), 단순한 폐쇄체계 및 개방체계보다는 자기조직의 개념이 강조된다. 이 패러다임에 의해서 비판 받는 것은 근대과학 및 고전역학이 아니라 ‘기계론적 세계관’, 그로부터 파생된 왜곡된 패러다임, 그에 기초한 모델 및 방정식인 것이다.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은 특정 연구주제에 대한 다수의 분과학문들의 기여를 통합하여 단순한 합 이상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특징적이다. 이처럼 지역연구가 학제적 연구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 다만 그 현실적인 연구 수행 가능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통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초분과학문적(transdisciplinary) 연구에서 개별학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다분과학문적(multidisciplinary) 연구 및 교차학문적(cross-disciplinary) 연구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권세은 2005, 94).
- 7) 시스템은 다양한 차원의 층을 이루는 위계구조(hierarchy)로 되어 있는데 각 구성요소들은 각각의 차원에서 고유한 권리를 가진 아전체(亞全體/sub-whole) 즉 홀론(holon)이다. 이 구조는 두 경향 즉 자기주장경향(self-assertive tendency)과 자기초월경향(self-transcending tendency)을 띠어 자기의 개체성을 주장하면서 준 자율적 전체(quasi-autonomous whole)로서 행동을 하고, 동시에 다단계적인 위계구조에서 보다 큰 전체에 통합되는 부분으로 행동하게 된다(권세은 2004, 135).
- 8) 지역을 복잡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지역의 본질이란 개별적인 요소들로 분리할 수 없는 복합, 즉 요소-복합(element-complex)들의 중첩과정이 지역적 차별화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간주되었다(Hartshorne 1939; 권경화 2001, 85). 그런데 지역을 반독립적인 요소들의 복합체로 간주하는 경향은 존재하였으나 그 내부 메커니즘의 규명방법에서는 최소 공간단위를 찾으려는 요소 환원적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런 방법으로는 지역의 자기조직화 및 진화의 과정, 즉 시스템의 가변성과 역동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권세은 2004).
- 9) 결과적인(resultant) 것 과 ‘창발적인(emergent) 것’을 구분하여 처음으로 체계적인 학술 용어로 사용한 사람은 루이스(G. H. Lewes)다(C. L. Morgan 1923, 3). 전체는 단순한 부분의 총화 이상의 것이며 부분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전체론(Holism)과 연관이 있다. 생물학적 진화의 관점에서도 생물체의 각 부분에는 물리화학적 법칙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분들이 결합되면 그보다 고차원적인 질적 발전을 이루어 그것에는 새로운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보다 상세한 인식론적 창발성과 존재론적 창발성의 개념과 사회과학방법론에 대해서 민병원, 나정민(2006) 참조.

다. 지역의 속성이나 다양한 현상들은 이런 창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환동해 지역에서 8,9세기 상호관계성, 근대의 상호관계성, 오늘날 상호관계성이 새롭게 구성되어 왔다.

이런 창발적 특성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환원적인 방법은 전체적인 창발현상도 결국 부분들로 소급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이런 인식에서는 전체적인 창발현상이 궁극적으로 구성요소들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는 거시적 단계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구성요소들의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 단지 우리가 구성요소들의 성질과 그 상호관계를 완벽하게 안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시적 창발단계와 미시적 구성요소 단계 사이에 일종의 ‘간극’이 발생한다는 즉 기술단계, 인식단계의 한계점이 나타날 뿐이다. 이러한 인식론과는 다르게 복잡응계체계에서는 창발성이 그 자체로 존재론적 특성을 지닌다. 창발현상이 그 자체의 존재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 낮은 수준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상의 속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더 낮은 수준에서는 기술할 수 없는 거시적 단계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민병원, 나정민 2006).

환동해 지역의 속성은 다양성, 중층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변용의 역동성이 현저하다. 환동해 지역의 속성은 국가적, 민족적, 지방적 특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그 속성의 변화는 전체로서 환동해 지역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국가, 지방들 또는 국가간, 지방간 관계의 변화에 기인하게 된다. 따라서 환동해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분할할 수 있을지라도 그 관계나 기능은 분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인 환동해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상호간의 관계만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그 속성을 해석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환동해 지역의 속성은 단일요소가 아닌 다양한 여러 요소들의 비선형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다. 따라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자연적·지정학적 분석 등 부분적 인식이 아닌 보다 포괄적 인식틀이 필요하다.

환동해 공간은 다양한 부분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되어 있어 연구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환동해 공간을 존재케 하는 실재(real)영역은 ‘개념’,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메커니즘은 현실적으로 관찰되는 현실(actual)영역이나 경험(empirical)영역이 아니며 이론적 개념이나 프레임 워크에 의해 간접적으로 추정될 따름이다. 중층화(重層化)된 세계에 대한 인식은 각각의 학문적 수준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의 메커니즘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시스템 내부 상호작용이 보다 큰 전체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잡한 현상을 궁극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는 환원주의를 벗어나 현상을 존재론적 층위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층위를 고유한 분석수준으로 삼아 고유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이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이를 인식주체가 발견하여 연구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지역을 인식대상으로 삼거나 자신이 속한 대상으로 다름으로써 지역은 창조될 수 있다(하세봉 2001). 동아시아 연구에서 지역의 범위는 시간과 공간적 수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동아시아 연구가 주로 어떤 특성이 유사한 지역범위로 규정되는 등질지역을 찾아 나서는 작업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중심지의 기능이 미치는 범위인 기능지역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치적 기능지역, 경제적 기능지역, 문화적 기능지역 등 구체적인 요소에 따라 환동해 지역

은 그 지리적 영역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신축적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동아시아는 하나가 아니라 다수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다수의 동아시아들이 중첩될 수 있다. 아울러 환동해 지역은 이미 존재했던 것의 발견일 뿐 아니라, 만들어 가는 발명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연구에 있어서 단위 설정은 ‘개념’, ‘메커니즘’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이런 맥락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IV. 해륙학¹⁰⁾으로서 환동해학 모색

환동해라는 지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부분과 전체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이 구체화 할 수 있다. 환동해 지역은 다양한 부분들의 시간과 공간 의해 짜인 지역으로서 현 시점에서는 마치 하나의 작품으로 존재하는 세계이다. 그렇다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세계를 인식할 수 있을까? 물론 역사적 고찰이 중요하다. 하지만 오래된 역사적 사실과 현상 모두가 현시점이라는 지역 및 지역성과 서로 관계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카타쿠라 모토코 1999, 271). 따라서 현 시점이라는 시간 축 상에서 특정 지역공간의 성격을 해석할 때 역사성은 중층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동해 지역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에 대한 논리, 즉 ‘부분의 합이 전체’라는 견해와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견해가 충돌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역 속성은 궁극적으로 구성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거시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구성요소들의 단계에서 결정되는 성질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환동해 지역을 구성하는 부분(국가, 민족, 지방 등)들에 대한 인식이 누적되면 곧 지역 전체를 인식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에 환동해의 전체적인 성격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국가나 지방 성격의 합이 되게 된다. 하지만 환동해의 속성은 그 자체의 존재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 낮은 수준으로 환원되지 않는 성질로 이해해야 한다. 환동해 지역의 속성은 일정 단계에서 실재하는 특성이기에 더 미시적 수준이나 거시적 수준에서 기술될 수 없다. 따라서 환동해에 대한 이해는 부분에 대한 인식과는 별도로 존재하며, 부분의 이해로 전체의 이해에 도달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환동해 범위는 다위계적, 다층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환동해 연구에서 범위는 주로 지리적 측면에서 주로 설정되거나 역사적, 문화적, 문명적, 지정학적 측면에서 설정되곤 한다. 이런 부분적 범주들을 초월하는 학제적인 지역연구를 위해서는 지역설정에서 다층적 범주 설정이 필요하다. 강, 산, 바다와 같은 공간의 물리적 조건이나 객관

10) 해륙학(Land-Ocean Interaction Studies)이라는 개념은 환경학적 논의와 해륙사관(海陸史觀) 논의를 참조하고자 한다. 해륙학은 바다와 이를 둘러싼 육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인식과 변화상을 포착하기 위해 명명한 용어로, 환경학 분야에서 해안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조수, 대기, 강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독립변수들의 상호작용성을 포착하는 종합적 접근방법을 정의한 용어이다. 해륙사관은 해양과 육지를 유기체로 인식하는 역사시각이다. 한국의 역사를 동아시아적인 틀 속에서 이해하는 동시에 해양과 육지를 유기체로 인식하는 시각이다(최남선, 윤병철 논의 참고).

적인 조건도 결국 사회적으로 주관적 인식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환동해라는 공간은 환동해 자체의 속성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관련된 특성과 그 관계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

1. 환동해 범위

지역 연구자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과제는 지역의 범위(scale)를 어떻게 정하고, 그 수준(level)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이다. 대부분 연구에서 환동해는 '(동)아시아'에 포함되며 지역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유동적이다. 한국의 동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학문적 특성에 따라 그 개념이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다. 용어 문제 역시 마찬가지인데, '환동해' 지역 개념은 일본의 '환일본해'지역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기존 환동해 공간에 대한 개념은 경제/안보/문화 차원 그리고 지역/미래 차원에서 다양하게 정의된다. 환동해 공간에 대한 연구의 주 경향은 환동해 경제권을 중심으로 논의됨으로써 그 범위 설정의 기준이 경제적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협의적 정의로는 한국(강원도, 경북, 경남, 대구, 부산), 북한(함경남도, 강원도), 중국(길림성, 흑룡강성), 일본(일본해 연안 14개 道府縣), 러시아(연해주)를 포함하고, 광의적 정의로는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극동지구, 중국의 동북3성을 포함하게 된다. 초 광의적 정의는 광의적 정의에 몽고, 발해만 지역 등을 포괄하면서 동북아시아와 유사한 개념이 된다.

지역연구에서는 환동해 권역을 동북아, 동아시아라는 개념과 구분하고, 인문학적 요소를 고려하면 지역의 범위를 중층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게 된다. 정치·안보 관계 분석에서 환동해는 국가 수준의 연구범위로 상대적으로 협 범위 수준에서 규정 될 수 있다. 이 수준에서는 내포의 극대화(많은 정의적 속성), 외연의 극소화(좁은 범위의 사례)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며, 여기서 획득한 이해는 시간 및 공간적 제한을 많이 받게 된다. 초민족적, 초국가적인 문화와 상호관계를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주로 중 범위 수준의 개념이 적용된다. 이 수준에서는 비교적 동질적인 맥락들 간의 지역을 비교분석 하게 된다. 개별국가 단위가 아니라 전체로서 동북아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하기에 민족, 문화, 언어, 종교, 생활습관 등과 관련된 연구에 종종 적용되는 범위이다. 예컨대 동아시아 정체성 논의나, 문화권 논의에서는 지역은 주로 중범위로 정해진다. 초 광의적 환동해 개념은 주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지정학적, 지경학적 연구에서 사용된다. 내포축소(더 적은 정의적 속성), 외연확대(더 넓은 범위의 사례)를 통해 이질적 맥락에서의 전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된다. 결국 환동해 공간의 범위는 협범위, 중범위, 광범위 등 중층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2. 장(場)으로서의 환동해 재인식

여기서 연구 단위인 '지역'은 실재하는 구체적인 공간 및 장(場)이면서 동시에 추상적으로 만

들어진 개념의 장일 수도 있다.¹¹⁾ 환동해라는 단위도 이런 지역 중 하나이다. 하지만 지역성을 어떻게 정의하든 연구자들은 환동해를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으로만 가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역을 규정하는 지역성은 미리 정해지거나 구체성을 띠는 존재가 아니다. 특정한 논리에 근거하여 지역성이 정해지고, 그 성격에서 지역의 개념이 규정된다. 결국 지역의 정의는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공간, 장이므로 그 범위와 수준을 규정하는 논리를 반영하게 된다.

환동해 지역은 단순히 지리적 시각에서 정해진 고정된 지역개념이 아닌 역동적이고 관계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변경(邊境)적 공간개념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즉 환동해를 물리적·절대적 공간 안에 가두지 않고, 사회적이고 상대적인 공간 속에서 개념화하고, 재현, 실천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되는 공간이다. 환동해 공간의 개념적 그리고 현실적 상호작용의 변화과정, 그 변화과정의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동해라는 지역은 그야말로 다층적이고 다성(多聲)적인 관계의 장(場), 유기체적 네트워크로 짜인 공간이다.

3. 환동해 지역성의 재사유

지역연구 단위설정에서 보편적으로 지역성을 가정한다. 지역성이란 특정 공간과 연계해서 가지는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정체성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지역 담론에서 주요 기반 중 하나로 동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곤 한다. ‘동아시아성’이 존재한다고 믿고, 이를 발견해냄으로써 ‘동아시아를 하나로 사고’하는데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과연 동아시아 동질성이 존재하는가? 근대 이후 형성된 이질성을 문화적 동질성을 설명할 수 있을까? 전통문화와 동일성에 의한 착시효과이거나 동양과 서양에 대한 이분법적인 대항 속에서 서구라는 타자에 대한 대립항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서처럼 공동체 형성의 당위적 필요성에서 출발하는 ‘기획’의 속성으로 지역성이 제시되고 있다.

환동해 지역성에 대한 논의는 기존 동아시아 지역성 논의의 한계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정체성은 고정적·일원적이거나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지역 내외부와의 소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다원적이고 복수적인 관계성이다. 따라서 환동해 지역성은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창발적 공간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환동해 지역연구는 동아시아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물론 서구이론의 대타성에서 동아시아 전체를 동질화하는 이념적 논의 등을 포괄적으로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11) 인간은 사물들의 관계적 위치와 이들 간의 관련성으로 공간을 인식한다. 하지만 근대학문체계에서는 관계적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공간, 어떤 좌표체계를 가진 절대적 공간으로서 인식되었다. 공간과 사물을 분리하여 인식하고 이를 재현하기 위한 언어들도 공간(시간)적 언어와 사물의 본질적 언어가 분리되었다.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며 항상 그곳에 관계하는 사물들과 함께 생성, 발전, 소멸하게 된다. 기후, 식생, 산업 등이 입지해 있는 자연, 인문환경적 공간이며, 국가행정구역, 사회집단 거주지가 펼쳐져 있는 사회적 공간이며, 인간의 감정과 애정이 깃들여져 있고, 이를 표현하는 상징과 기호들로 가득찬 문화적 공간이다. 이런 공간의 지칭하는 용어로는 장(場), 권역, 지역, 처(處), 터 등이 있다. 실제로서 공간은 절대적 공간(선형적인 공간과 사물 분리), 상대적 공간(사물들의 개체가 위치 지어진 공간), 권력적 공간(사물들의 관계가 형성된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의 총체이다.

4. 학(學)으로서의 환동해 연구(East-Sea Rim Studies)의 정립

환동해 공간을 둘러싼 역내 국가들 중 일본은 정책적 연구의 수준을 넘어 종합학문으로 ‘일본해학(Japan-Sea Rim Studies)’의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해학’은 환일본해 지역 전체를 일본해를 공유하는, 하나로 통합된 권역으로 파악하여 일본해에 초점을 두고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환일본해 지역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 지역 간의 인간관계를 통합하는 학제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해학은 ‘순환’, ‘공생’, ‘일본해’ 세 가치를 기본적인 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환일본해의 자연환경, 환일본해 지역의 교류, 환일본해의 문화, 환일본해의 위험과 공생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¹²⁾

일본해학은 아직 새로운 학문으로서 체계화되지 못했다. 어떤 의미에서 실천적인 ‘새로운 실학’으로 정립되고 있다. 일본해학은 환일본해 지역 및 일본해를 하나의 순환·공생체계로서 파악하고, 지역·지구의 자연환경과 인간과의 연관성, 지역 간의 인간간의 관계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순환·공생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이다. 게다가 국가중심 사상에서 지역중심의 사상으로의 전환, 지역 아이덴티티의 확립, 인간안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런 ‘일본해학’의 특징은 환동해학의 정립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논리이다.

환동해학 정립과정에서 새로운 연구방법이 요구되는 데 그 중 하나가 해륙학이 될 수 있다. 해륙학(Land-Sea Interaction Studies)은 기존 연구의 대륙적 시각이나 해양적 시각과 같은 실체론적 방법을 극복하고, 결정론적이고 환원론적 연구방법을 극복하여 관계론적 관점인 ‘제(際:inter)’의 시각¹³⁾에서 지역의 실재를 해석하게 된다. 여기서 제의 시각이란 환동해의 존재론

12) 3가지 기본 개념은 ① 환일본해 지역이 주기성을 가진 지구 전체의 자연환경 시스템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개념인 ‘순환’이다. 지구전체의 순환 시스템 속에서의 생명과 인간의 역할을 이해하고, 순환 속에서만 살 수 밖에 없는 숙명을 이해하게 된다. ② 공생: 환일본해 지역에 있어서의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 일본해를 공유하는 지역 간에 있어서의 인간과 인간과의 공생이라는 개념이다. ③일본해: 환일본해 지역에 있어서 일본해의 기능을 바라보는 시점이다. 일본해는 대륙의 주변에 성장한 소해양이다. 태평양이나 인도양과 같은 대해가 아니다. 거대해양이 아니기 때문에 항해술이나 조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기 전부터 주변국의 여러 민족이 이 바다를 타기 시작해 그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권을 만들어냈다. 이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의 역사가 만들어져 왔다고 간주한다. 일본해, 그리고 바다가 가진 여러 가지 특성에 관점을 두고 인간이 얽힌 여러 가지 사상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게 된다.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①환일본해의 자연환경(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일본해 및 환일본해지역의 자연환경 변동의 역사를 해석하고, 변동의 주기성을 통해 미래의 변동을 예측한다), ②환일본해지역의 교류(일본해를 사이에 둔 환일본해 지역의 교류를 만들어 낸 요인이나 교류의 형태를 역사적 근거에서 지구적 규모의 관점에서 밝힌다), ③환일본해의 문화(환일본해지역의 민족이 환일본해의 자연환경이나 교류의 영향을 받아 형성한 생활문화, 바다의 사상이나 신앙을 밝힌다), ④환일본해의 위험과 공생(폐쇄해역으로서 일본해의 환경보전을 위한 방책이나 국제협력, 미래의 환일본해지역 교류의 가능성을 조사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 환일본해지역의 공생을 제시한다) 과 같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 학제적으로 조사연구를 진행한다(日本海學推進グループ 2001, 7-19).

13) ‘제(際:inter)’란 동양적 ‘際論’(박제가)에 기초하는 것으로, 지역의 구조 및 실재를 ‘관계성’ 및 ‘과정’ 자체로 사유하는 방법이다. 박제가는 ‘경계’의 영역을 중심으로 ‘제(際)의 이론’이라는 독특한 시론(詩論)을 제기했는데 ‘제’란 인간과 자연, 사물과 사물 사이를 가리키는 말로, ‘제의 이론’은 ‘경계의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제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과 사물과의 경계 및 중간; 인간간의 교제; 인간과 자연의 교감인데

적 창발성의 논리에서 비롯된다. 즉, 존재론적으로 환동해 공간은 상호관계성에서 형성된 유기체적 장으로,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네트워크, 맥락적, 과정 사고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際)로서의 인식 방법은 해륙적 시각의 기초가 된다. 즉, 환동해학은 해륙공간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이면서도, 동시에 사유의 체계를 전환하는 인식론적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해륙학적 연구방법론은 동해를 매개로 형성되는 해륙간 교섭 공간을 중심으로 문화적, 사회적, 자연·인문환경 공간의 상호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해석(解釋)하게 된다. 이는 환동해 지역의 정황적 지식 생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연구 방법이다. 이를 위해 환동해 지역의 현재적 현상과 변화 과정을 동시에 고찰하고, 인문, 사회, 자연의 분과학문적 전문성을 해륙학적 환동해학으로 통합하게 된다.

V. 결 론

환동해 지역은 아직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여전히 주변적이다. 그러나 환동해라는 개념은 점차 현실성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환동해라는 지역단위는 지역연구에서 실천적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현실적 영역에서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는 관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학문적 수준에서 ‘어떻게’ 환동해를 정의하고 연구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지역연구로서 환동해에 대한 연구가 출발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환동해는 주로 보편적인 분류에 따라 구획되는 ‘일반지역’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역사적·문화적·정치적 속성을 갖는 특수지역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동해는 환태평양(Pacific rim)의 북서 부분으로 또는 유라시아 림랜드(Rimland)에 접해 있는 바다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환동해는 시대에 따라 임의적으로 정책적 논리에 의해 동북아시아와 같이 세계지역에 편입되기도 하고, 비교적 동일한 문화를 갖는 지역 즉 유교문화권이나 한자문화권으로 편입되기도 한다. 동시에 분과 학문적으로 환동해 지역은 인류학자나, 지리학자, 언어학자, 사회학자들에 의해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 연구나 공동체 연구(community study), 국제관계와 같이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연구(national study), 자원, 물류, 경제협력, 분쟁(민족, 종교, 국경)과 같은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중심연구(problem approach)의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연구로서 환동해 연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다양한 분과학문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초월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인식 및 인식방법을 전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동해 지역’을 복잡적응체계로 가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지역연구를 모색하고자 했다. 지역은 자신을 존재케 하는 메커니즘에 따라 타 체계와 구분된다. 그리고 지역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능동적인 주체가 환경과 상호 교류하며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장이다. 이

그 공통적인 개념은 ‘관계 설정’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경계에서 형상은 다양한 선택에 의해 구성되므로 실체가 아닌 관계로 표현된다. 이처럼 경계(中)에서 만물은 변화하면서 구성(和)되기에 결국 경계는 우주 만물이 탄생하는 혼돈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권세은 2005).

공간은 사회적 행위의 조건일 뿐 아니라 사회적 행위의 결과로 항상 새롭게 형성되는 장인 것이다. 이런 개념에 의하면 지역은 찬합형태로 위계성 및 개방성을 띠는 복잡적용체계이다.

환동해라는 지역은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적응하여 구성되는 세계이다. 이러한 지역은 특정 요소로 환원하는 방법을 통해 특정 부분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복잡적용체계로서 환동해는 존재론적으로 창발되기 때문에 그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중층구조를 가정하고, 근본적으로 세계는 층화되어 있다는 인식을 전제해야 한다.

결국 환동해 지역의 시간과 공간, 전체와 부분의 상호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핵심은 작동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위수준의 개념들이 제공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부분의 요소와 특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역이 단지 부분들로 이루어진 양적인 집합체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지역의 속성은 부분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결과가 다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비선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 이해로 해석될 수 없다.

지역연구 단위로서 ‘환동해’는 실재하는 구체적인 공간 및 장(場)이면서 동시에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의 장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지역성을 어떻게 정의하든 기존의 연구자들은 환동해를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으로만 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역을 규정하는 지역성은 미리 정해지거나 구체성을 띠는 존재가 아니다. 특정한 논리에 근거하여 지역성이 정해지고, 그 성격에서 지역의 개념이 규정된다. 결국 지역의 정의는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공간, 장이므로 그 범위와 수준을 규정하는 논리를 반영하게 된다.

참 고 문 헌

- Hartshorne, R(1939). *The Nature of Geography*.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 Koestler, Arthur, 최효선 옮김(1994). 『야누스-혁명적 홀론이론』. 서울: 범양사.
- Morgan, C. L(1923). *Emergent Evolution*. London.
- 구자문(2008). “환동해경제권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분석과 포항의 적극참여를 위한 전략 연구.” 『환동해리뷰』. 제4권, 2호.
- 구형권(1997). “환동해권 경제의 전망.” 한국환동해학회 창립대회.
- 권세은(2004). “지역연구의 패러다임으로서 복잡성에 대한 시론.” 『국제지역연구』. 제8권, 1호.
- 권세은(2005). “학제적 연구에 대한 인식론적 시론.” 『비교문화연구』. 제9권, 2호.
- 권세은(2009). “지역연구 단위로서의 유라시아에 대한 일고.” 『중소연구』. 제32권, 4호.

- 권정화(2001). “부분과 전체: 근대 지역지리학 방법론의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7권, 4호.
- 김신(2005). 『동해연구: 동해의 지명표기의 역사적 이론과 전략』. 서울: 지영사.
- 김원배(2005). 『환동해경제권 구축과 동해안지역의 역할』. 서울: 국토연구원.
- 김원배(2006). “환동해경제권 형성 선도를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 『국토정책』. 제99호.
- 마에다 니리후미(1998). “지역연구 세계관.” 야노 토루 엮음. 『지역연구방법』. 서울: 전예원.
- 민병원, 나정민(2006). “창발성의 철학적 개념과 사회과학 방법론.” 제 1 회 복잡계 컨퍼런스 - 복잡계 이론과 현실, 생산적 적용의 모색.
- 박상수(2010). “한국발 ‘동아시아론’의 인식론 검토: 동아시아연구, ‘초국가적 공간’으로부터 접근하자.” 『아세아연구』. 제53권, 1호.
- 서찬수(2005). “환동해권시대의 경북 동해안지역 개발방향.” 대구경북연구원.
- 심의섭(2009). “신동해 교류전망: 환동해지역의 물류협력 및 산업발전 전망.” 신동해권 경제교류 전망과 지역협력구상 국제세미나.
- 안병민(2008). “환동해권 공동운송시장 및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해선 개발방향.” 환동해 복합물류 거점도시 발전을 위한 정체세미나.
- 원동욱(2007). 『동북아교통물류협력:현황과 과제』. 한국교통연구원.
- 위은숙(2003). “8, 9세기 환동해교역권의 구조와 성격.” 『민족문화연구총서』. Vol. 26.
- 윤영수·채승병(2005).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 이정남(2006). “동아시아 협력 네트워크와 지방의 역할:‘동북아차치단체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9권, 4호.
- 이중희(2000). “한국의 지역연구: 가능성과 한계.” 『국제지역연구』. 제4권, 1호, pp.1-21.
- 日本海學推進グループ(2001). “日本海學の提唱とその意義.” 『日本海學の新世紀』. 角川書店.
- 정여천편(2008). 『러시아극동지역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蔡善姬(1996).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의 재정립을 위한 개념적 접근: 질적·양적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Vol. 34, No. 5.
- 최승업(1998). 『환동해 경제권내에서 강원도의 역할과 경제적 실익제고 방안연구』. 강원개발연구원.
- 최승업(2002). 『환동해경제권 관련 한일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보고 02-03. 강원발전연구원.
- 카타쿠라 모토코(1999). “세계단위-中東의 경우.” 『지역연구와 세계단위론』. 전예원.
- 하세봉(2001). 『동아시아 역사학의 생산과 유통』. 아세아문화사.

Abstract

East-Sea Rim as A Research Region in Area Studies

Kwon Se Eun*

This paper reviews the East-Sea rim as a research region in the field of area studies based on the level of normative and epistemological perspective. When a area specialist investigates regional problems, he/she needs to answer a few of questions relates to normative and epistemological perspective, for instance, why do I need to study about a certain region? How do I conduct the research with this specific region?

The concept of East-Sea rim as a research agenda has not been seriously recognized in scholarly field and seems to be used as an abstract terminology in social and natural science. However, the existential meaning of the East-Sea rim region tends to arouse researchers' interest and have become a generalized concept from the last decade. Therefore, the concept of East-Sea rim is regarded as a specialized research agenda which includes the necessity of systematized study. The purpose of East-sea rim research, as a whole, is to investigate and understand the regional mechanism which could be revealed in terms of the very existence of regional reality.

I regard East-sea rim region as one of regions implying 'complex adaptive system' at the primary category, and presume the unit level of this region which cannot be reducible to the level of element. I also assume that the whole system of the region is not the same as a sum of independent parts. In sum, I emphasize, the East-Sea rim region needs to be recognized as a composite of multi-layered properties. In other words, it shouldn't be understood as a strictly hierarchical system organized in mechanistic manner, rather, it can be better represented as a form of 'complex adaptive system.' Such a system in which the behavior of the whole system cannot be predictable by focusing on the analysis of its components' behaviors, and each property of the whole system tends to emerge from the initial level into the next level - these multi-leveled analysis can be overlapped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 논문접수일 : 2010년 7월 10일, 논문심사일 : 2010년 7월 29일, 게재확정일 : 2010년 8월 15일

* Department of Russian, Kyung Hee University